

국민의힘 구미시(을) 국회의원 강명구

보 도 자 료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의원회관 1018호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30길 7-3, 3층

T. 02-784-2844~6(서울) E. myounggu.power@gmail.com

T. 054-715-9902(지역)



강명구 의원, “중소기업은행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사건 피해액 5년 간 46억 원…미환수 금액 15억 원에 달해”

- 중소기업은행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사건 피해액 지난 5년간 46억 400만 원... 미환수 금액 15억 1,200만 원에 달해
- '가상자산 거래', '도박 자금' 등 개인 사익 위해 고객 자금 편취...내부 기강 해이 심각
- 횡령 비리 저지른 직원 추가 징계하는 '징계부가금' 마련 안 돼...기재부 지침 위반 논란도
- 강명구 의원, “내부통제 강화, 징계부가금 제도 마련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책은행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은행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피해액이 4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시을)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중소기업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6억 400만 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은행의 횡령 사건 피해 현황]

년도	횡령 사건 발생 건수	횡령 피해 액수
2019	4건	26억 원
2020	1건	100만 원
2021	5건	4억 7,400만 원
2022	4건	9억 3,000만 원
2023	4건	5억 9,900만 원
합계	18건	46억 400만 원

*출처: 중소기업은행 자료 편집

횡령 사유로는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 도박자금 마련 등이 있었다.

2019년에 A대리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고객 예금 24억 500만 원을 횡령하여 면직됐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 최대 금액이다.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대출금 5억 2,900만 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또, B대리는 시재금 1억 5,300만 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미환수금이 15억 1,200만 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횡령액의 3분의 1에 달했다.

징계부가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징계부가금은 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이나, 기업은행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국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은행은 4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제10항]

⑩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직원의 금품 및 향음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음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 등에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 고 해명했다.

강명구 의원은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민이 어려울 때 우산이 되어주곤 했다”며, “내부통제 강화,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등 횡령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